

소득불평등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채 구 목

(원광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소득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소득불평등 실태 및 원인 분석을 요약해 보면, 첫째 외환위기로 급등한 소득불평등도는 1999-2004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2005년 현재 외환위기 직후와 같이 높은 수준이고, 둘째 소득불평등도 원인에 대한 장기분석(1985-2004년) 결과,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자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외환위기 전후(1995-2004)의 소득불평등도 원인 분석 결과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대·소기업임금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넷째 장기자료(1985-2004)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자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전후자료(1995-2004)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장기자료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대·소기업임금비율은 외환위기 전후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율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셋째 부동산 가격을 안정 또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주제어: 소득불평등, 소득양극화, 소득격차, 빈곤

* 본 논문은 2006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서론

소득불평등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심화된 소득불평등은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소득수준이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는 1997년 0.256이었으나 외환위기 다음 해인 1998년 0.290으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약간 낮아졌으나 2005년 0.32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2006b).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5분위 배율(제5분위 소득점유율÷제1분위 소득점유율) 역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득양극화 실태를 좀 더 잘 나타내주고 있다. 1997년 소득5분위 배율은 2.921이었으나 외환위기 다음 해인 1998년에 3.368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외환위기가 극복된 2005년 현재 3.840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2006b).

한국의 경우 서구 선진국과 달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느끼는 소득불평등도는 더 크다 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80이나 조세와 사회보장 급여 후의 지니계수는 0.272로 많이 낮아진다(유경준, 2003: 10). 그러나 한국은 2000년 지니계수가 0.317이나 조세, 재정지출 및 사회보장급여 후의 지니계수는 0.294로 미미하게 낮아지고 있다(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2002: 57-58).

소득불평등은 다수의 빈곤층을 양산하며, 이들에게 엄청난 생계유지의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초래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소득불평등은 저소득층의 소비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유효수요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득불평등은 또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저하와 빈곤의 대물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소득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로 외환위기 이후 높아진 실업률의 외환위기 이전으로의 미 회복,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조로 인한 해고완화와 비정규직 증가,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해외이전과 기술집약적 대기업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개편으로 인한 소기업·대기업 간의 임금격차 심화, 이혼·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증가 및 노령화에 따른 노인가구주의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격차 심화 등을 들 수 있다(구인회, 2004: 58; 김영란, 2004: 246-247; 전강수, 2005, 성명재, 2002).

소득불평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들은 기존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지니계수 및 빈곤의 추이를 추정하는 연구들(이정우·이성림, 2001; 김진욱, 2002)과,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를 다룬 연구들(손병돈, 1999; 홍경준, 2002; 김교성, 2002; 최정균·최재성, 2002; 박찬용·강석훈·김태완, 2002; 유경준, 2003;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 2005; 김환준, 2005; 정진호·황덕순·김재호·이병희·박찬임, 2005)이 주류를 이루어왔다.¹⁾ 한편 패널자료가 제공되면서 빈곤지속기

간 및 빈곤이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김교성, 2002; 구인회, 2002; 정진호 외, 2002)이 발표되었으며, 시계열 분석을 통해 빈곤원인 및 원인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안국신·박완규·유항근, 1995; 성명재 2001; 구인회, 2004)이 이루어졌다.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소득계층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성, 학력, 연령 등) 공·사적 이전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빈곤이행의 영향력을 다룬 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득종류(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의 빈곤이행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연구들은 소득계층,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득종류 등으로 분해하여 빈곤을 추이 및 빈곤이행 등을 다루고 있다. 한편 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빈곤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거시적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빈곤 및 빈곤수준 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빈곤 및 빈곤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거시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구인회(2004), 성명재(2001), 안국신 외(1995) 등을 들 수 있다. 구인회(2004)는 1991년, 1996년, 2001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빈곤추이의 변화요인을 경제성장, 분배구조의 변화, 인구학적 변화 세 가지로 분해하여 분석하였으나, 그의 연구는 1991년, 1996년, 2001년 3개년의 자료만 활용했으며, 독립변수들도 매우 포괄적인 개념들이 사용되었고 비정규직 증가비율, 대기업·소기업 임금격차, 지가변동률 등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제외되어 있다. 성명재(2001)는 계층별 소득격차 확대, 선진경제 진입에 따른 산업 간의 비대칭적 발달, 구조조정에 따른 무직가구의 증가 등 경제적 요인과 여성가구주 증가, 노령화의 진전 등 비경제적인 요인이 소득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각 개별요인들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뿐 이러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 안국신 외(1995)는 1965년-1993년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그의 연구는 IMF 이전 자료만 가지고 분석했으며, 독립변수도 IMF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다른 연구와 차별성,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소득 불평등 원인을 두 개의 자료, 즉 장기자료(1985-2004)와 IMF 관리체제 전후의 중기자료(1995-2004)를 이용하여 분석해봄으로써 소득불평등에 대한 장기적 원인과 IMF 전후의 중기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둘째, 소득불평등 원인에 대한 독립변수로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사회경제적 사항들과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사항들, 즉 경기변동과 관련된 실업률, 고용불안정 및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비율, 대기업·소기업 임금비율,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여성가구주 비율, 재산불평등과 관련된 지가변동률 등이 함께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취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선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해 불평등의 변화추

1) 특히 박찬용 외(2002), 유경준(2003), 여유진 외(2005), 김환준(2005)의 연구는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uxembourg Income Study)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이전 및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에 대해 OECD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불평등 원인 관련 기존연구를 검토해보고, 장기시계열 및 IMF 전후의 중기시계열 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 원인 및 원인 변화를 분석해본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²⁾

2. 소득불평등 계측 및 실태

1) 소득불평등도 계측

소득불평등도는 소득의 개념, 불평등 측정단위, 불평등 측정방법에 따라 약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각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소득개념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 의하면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소득은 규칙적인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금, 임대료 등), 이전소득(공·사적 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경상소득은 불규칙적인 소득(축의·조의금, 복권·경품권, 장학금 등)으로 전체소득에서 경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다.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도는 경상소득 기준의 소득불평등도보다 높게 나타나며(정진호 외, 2002: 21-22), 실제소득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한 전체소득을 이용하였다.

한편 소득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시장소득은 개인이 시장에서 획득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가처분소득은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시장소득에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급여를 더한 후 사회보장분담금 및 소득세를 뺀 금액이다. OECD 연구들의 경우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처분소득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시장소득에 의한 불평등도와 가처분소득에 의한 불평등도 비교를 통해 사회보장이전을 통한 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를 파악하고 있다.

(2) 측정단위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한 단위로 개인과 가구가 있는데, 개인보다 가구를 단위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주로 가구단위로 이루어지고 각종 사회복지급여도 가구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가구를 측정단위로 할 경우 가구마다 가구원 수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가구원을

2) “도시가계조사”는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했으며, 1인가구를 제외했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장기시계열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가장 적합한 자료라 사료되어 이 자료를 이용했다. 한편 도시가계조사는 도시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불평등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연구제목도 ‘도시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붙였다.

동등화 한 후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그 동안 한국에서도 장현준(1986), 박순일 외(1994), 김진옥(2002), 김미곤 외(1999) 등에 의해 가구 균등화지수가 개발되었으나,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러 가지 가구 균등화지수 중 룩셈부르크 소득연구(Luxembourg Income Study)에서 채택한 방법이 많이 활용되며, OECD에서도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소득연구는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선진국 20여 개국의 소득분배 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다. 룩셈부르크에서 채택한 균등화지수 환산적도는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며, 이렇게 구한 값을 균등화소득(equivalent income)으로 정의한다(이정우·이성림, 2001: 91).³⁾

본 연구에서도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소득을 소득불평등도 측정단위로 활용하였다.⁴⁾

(3) 불평등도 측정방법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로렌즈곡선과 45° 선에 둘러싸인 면적을 45° 선 이하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지니계수는 소득분배가 완전하게 평등하면 0, 완전하게 불평등하면 1이 된다. 지니계수는 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간단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째는 지니계수가 같은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한지 중간계층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한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로렌즈곡선과 45° 선 사이의 면적이 같더라도 로렌즈곡선의 하단이 볼록한 경우는 저소득층의 불평등도가 심하고, 로렌즈곡선 상단이 볼록한 경우는 중상층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한데 지니계수만 가지고는 이들의 파악이 어렵다. 둘째, 지니계수만으로는 소득분배 형태의 변화가 어느 계층의 소득변화에 의해 발생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특정 사회의 두 시점 간에 지니계수가 낮아져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었을 경우 저소득층 소득이 향상되어서 그런지 중간계층 소득이 향상되어서 그런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② 소득5분위 소득점유율 및 소득5분위 배율⁵⁾

소득5분위 소득점유율은 전체 소득대상을 소득에 따라 5분위로 나누고, 각 분위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소득5분위 배율은 최상위인 5분위 소득점유율을 최하위인 1

3) 균등화소득은 1인당 소득과 비슷한 개념인데,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것이 아니고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이다. 가구원 수의 차이를 고려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는 것이지만, 이렇게 할 경우 가계소비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 즉 규모의 경제가 고려되지 않게 된다. 가족 수가 두 배가 된다고 해서 지출이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sqrt{2}$ 배 정도 된다는 것이다.

4)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는 통계청 통계원시자료제공시스템(http://mdss.nso.go.kr/old_mdss)을 통해 구입하였다.

5) 소득5분위 소득점유율 및 소득5분위 배율 대신 소득10분위 소득점유율 및 소득10분위 배율도 많이 사용된다.

분위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소득5분위 배율은 소득불평등도를 하나의 수치로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고, 양극화 현상을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간 분위의 점유율 변화가 잘 고려되지 않고, 각 분위 내에서의 소득분배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③ 계층별 인구점유율

이 방법은 소득계층을 상위계층, 중위계층, 하위계층 등과 같이 여러 계층으로 나누고, 각 층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을 산출해 보는 것이다.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방법은 절대적 방법과 상대적 방법이 있다(Karoly, 1993). 절대적 방법은 각 소득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소득액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디플레이터 시킨 불변소득액으로 정하고, 이 불변소득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각 소득계층에 속한 인구비율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절대적 방법은 분배형태의 변화와 실질소득의 변화를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하위계층의 비율이 줄어든 경우 분배형태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 경제성장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Karoly, 1993; 김태성, 2002: 163). 상대적 방법은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소득액을 각 연도의 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정하고, 이 기준으로 구분한 각 소득계층에 속한 인구비율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상대적 방법은 분배 형태의 변화만을 반영한다. 즉, 모든 계층의 실질소득이 증가할지라도 분배형태에 변화가 없다면 각 층에 속한 인구의 비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계층별 인구점유율 방법은 절대적 방법이든 상대적 방법이든 모두 계층구분이 임의적이며, 계층 내에서 소득분배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김태성, 2002: 163).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도 계측방법으로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을 활용하고자 한다.

2) 소득분배 분석자료

소득불평등 실태 및 원인분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등이 있다.

“도시가계조사”는 통계청에 의해 1982년부터 매월 실시되는 조사로 가구소득 불평등도 측정을 위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자료는 동일한 대상을 장기간 조사했기 때문에 장기간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추이 및 시계열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도시가구로 한정되어 있고, 도시에서도 사업자 및 자영업 가구소득이 파악되어 있지 않고, 1인 가구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통계청에서 1991년 이후 5년 간격으로 전국의 모든 가구에 대해 연간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이 자료는 전체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가 5년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각 년도의 소득불평등도 파악이 어렵고, 조사가 1991년부터 실시되어 그 이전의 소득불평등도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5인 이상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이 조사는 원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란 명칭으로 조사·발간되었으나 1992년부터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자료는 장기간(1980년대 포함)의 소득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대상자를 1998년 까지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했고 1999년부터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 군·경찰·소방서, 국·공립 교육기관, 병원, 도서관, 국제기구 등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모든 임금근로자에 대해 임금소득을 조사하고 있으나, 부정기적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최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소득불평등도를 분석하는데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도 변화추이 및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장기간(1985-2004)의 일관성 있는 자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도시가계조사의 2003년과 2004년 원시자료에는 농촌가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3년과 2004년 자료에서 농촌가구를 제외시켰다.

3) 소득불평등 실태

1985년 이후의 소득불평등도 실태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1985년 0.2877을 최고점으로 하여 그 이후 점점 낮아져 1991년 0.2445로 최저점에 도달했다. 1992년 이후 약간씩 높아지다가 IMF 경제위기를 당한 1997년 예상과 달리 0.2562로 낮아진 후, 1998년 무려 0.0341이나 증가한 0.2903이 되었다. 그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4년 0.288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높아진 지니계수는 외환위기가 극복되고 소득수준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소득5분위 배율을 살펴보면 지니계수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1985년 3.082에서 계속 감소하여(1989년은 예외) 1991년 2.736으로 최저점에 도달했다. 1993년 이후 약간 높아지다가 1997년 2.921로 약간 낮아진 후 외환위기 다음 해인 1998년 3.368로 0.447이나 증가했다. 그 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1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4년 3.368로 외환위기 직후와 같은 수준이다.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을 비교해보면 2004년 지니계수(0.2885)는 1985년 지니계수(0.2877)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지니계수(0.2903)보다 낮은 반면, 2004년 소득5분위 배율(3.368)은 1985년 소득5분위 배율(3.082)과 1998년 소득5분위 배율(3.368)보다 더 높거나 같은 수준이다.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이 모두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이지만 소득5분위 배율이 소득양극화 현상을 좀더 잘 나타내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특히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중간계층을 배제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소득5분위 배율이 낮아졌던 1985-1991년의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을 살펴보면 하위계층인 1분위는 1985년 0.1095에서 1991년 0.1165로 높아진 반면, 상위계층인 5분위는 0.3376에서 0.3187로 낮아졌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인 1997-2004년의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을 살펴보면 하위계층인 1분위는 1997년 0.1107에서 2004년 0.1009로 낮아진 반면 상위계층인 5분위는 1997년 0.3233에서 2004년 0.3397로 높아

졌다. 요컨대 1980년대 후반기 및 1990년 상반기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된 것은 하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이 상위계층의 점유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며,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심해진 것은 하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이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짐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소득불평등 추이 (1985-2005)

연도	5분위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소득5분위 배율	지니계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985	0.1095	0.1498	0.1798	0.2233	0.3376	3.082	0.2877
1986	0.1090	0.1498	0.1814	0.2269	0.3330	3.054	0.2821
1987	0.1108	0.1507	0.1812	0.2226	0.3347	3.021	0.2768
1988	0.1136	0.1533	0.1834	0.2233	0.3265	2.874	0.2713
1989	0.1124	0.1511	0.1834	0.2220	0.3312	2.947	0.2647
1990	0.1158	0.1548	0.1839	0.2222	0.3233	2.791	0.2520
1991	0.1165	0.1554	0.1860	0.2235	0.3187	2.736	0.2445
1992	0.1158	0.1548	0.1861	0.2237	0.3196	2.759	0.2447
1993	0.1221	0.1594	0.1869	0.2206	0.3110	2.547	0.2517
1994	0.1130	0.1529	0.1847	0.2254	0.3239	2.866	0.2560
1995	0.1128	0.1531	0.1854	0.2262	0.3225	2.858	0.2576
1996	0.1102	0.1519	0.1860	0.2271	0.3248	2.947	0.2640
1997	0.1107	0.1525	0.1862	0.2274	0.3233	2.921	0.2562
1998	0.1038	0.1446	0.1791	0.2230	0.3495	3.368	0.2903
1999	0.1029	0.1444	0.1803	0.2256	0.3468	3.369	0.2922
2000	0.1071	0.1465	0.1800	0.2245	0.3419	3.192	0.2915
2001	0.1066	0.1463	0.1828	0.2270	0.3373	3.163	0.2918
2002	0.1061	0.1463	0.1820	0.2284	0.3373	3.179	0.2835
2003	0.1040	0.1477	0.1829	0.2277	0.3377	3.246	0.2857
2004	0.1009	0.1453	0.1837	0.2305	0.3397	3.368	0.2885

주: 1) 소득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는 전체소득을 가족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2) 각 분위별 소득점유율=각 분위별 소득액÷전체 소득액.

3) 소득5분위 배율=5분위 계층 월평균소득액÷1분위 계층 월평균소득액.

자료: 통계청, 2006b.

3. 소득불평등 원인분석

1) 소득불평등 원인 관련 기존연구 검토

소득불평등 심화에 따라 서구 선진국에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거시적 측면인 사회경제적 변화의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Budd와 Whiteman(1978)은 경기변동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 특히 실업률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들은 Mendershausen(1946: 68-73)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불경기 때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실직자들은 소득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직장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소득격차를 증가시킨다. 둘째, 모든 노동자들이 불경기 때 실직당할 확률이 동일한 것이 아니고, 저숙련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실직당할 확률이 높다. 관리자, 숙련 노동자는 사용자에게는 고정자산의 성격이 강하고, 기업은 이들에게 상당한 인적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불경기 때에도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며 해고당할 확률이 낮다. 셋째, 실업에 의해 저숙련 노동자의 초과공급이 발생해 저숙련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Budd and Whiteman, 1978: 13). Budd와 Whiteman은 1967년의 경제기회조사(Survey of Economic Opportunity)와 1948-1970년 동안의 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들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인종, 연령, 직업, 소득 등)에 따라 여러 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별로 실업률과 소득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한 후 분석결과가 위의 이론적 주장과 어느 정도 일치함을 입증하였다.

Blinder와 Esaki(1978)는 조사대상자들을 소득수준에 따라 5분위로 구분한 후, 각 소득분위별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실업률은 하위계층인 1-2분위에서는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상위계층인 4-5분위(특히 5분위)에서는 소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은 하위계층인 1-2분위(특히 1분위)에서는 소득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상위계층인 4-5분위(특히 4분위)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률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실업률의 영향력에 비해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안국신 외(1995)는 1965-1993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경제성장률은 소득불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업률은 소득불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은 비록 유의성이 크지 않지만 소득불평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안국신 외의 연구결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일치되지 않지만 Blinder와 Esaki의 연구결과와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uznets(1974)과 Paglin(1975)은 미국에서 가구주 연령분포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Paglin은 인구학적 변화, 특히 청년층 및 노인층 가구주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상 저임금을 받고 있는 청년층(14-24세)과 노인층(65세 이상) 가구주가 1947년 16.6%에서 1974년 21.9%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가 소득의 불평등도를 심화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Danziger와 Gottschalk(1995: 125-128)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 공급측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신규노동자의 유입이 신규노동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신규노동자들과 저숙련 일자리를 위해 경쟁해야 하는 기존의 저학력·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게 한다. 둘째, 노동시장의 수요측을 강조하는 견해로, 제조업 분야의 축소 및 노동과 자본시장의 세계화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가된 국제경쟁은 미국에서 산업생산의 감소를 초래했으며, 저학력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었던 좋은 일자리가 상실되게 만들었다. 또한 국제경쟁은 그 동안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향상과 조합원간의 임금차별 완화에 기여했던 노동조합을 약화시켰다. 반면 고급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은 세계화가 금융과 고급기술 분야에서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증가시켜 주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셋째, 공공정책의 변화,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의 급여와 자격의 제한, 물가를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의 하향, 세금제도 등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들의 의도되지 않은 효과가 가장 숙련이 덜된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넷째, 소득의 불안정성이 소득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쟁의 강화와 노동유연성 강조가 해고의 완화와 비정규직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저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Iceland(2003: 499-500)는 경제성장(소득증가), 분배구조의 불평등, 인구학적 변화와 빈곤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Iceland는 경제성장, 분배구조의 불평등, 가족구조의 변화가 20세기 후반 미국의 빈곤변화를 설명하는 주요변수가 된다고 주장했다. 첫째, 만약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과 임금이 상승할 것이며, 이는 빈곤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분배구조의 불평등은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다. 즉, 실직자들이나 저임금 근로자들이 경제성장의 결과를 향유할 수 없다면 경제성장의 빈곤완화 영향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셋째, 가족구조의 변화,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는 빈곤을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빈곤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증가는 빈곤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구인회(2004)는 1996-2001년 동안 한국에서 빈곤율이 상승했으며, 그 원인으로 소득불평등,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빈곤취약인구의 증가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Iceland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변동, 특히 불경기과 관련된 실업률은 근로자와 비근로자 간의 소득격차를 확대시켜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미숙련, 저학력 노동자들은 실직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둘째,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에 의한 노동의 유연화 및 불안정한 고용, 고용구조의 변화는 소득분배

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제경쟁의 강화는 해고의 완화 및 비정규직의 증가를 초래했으며, 국가간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숙련편향적 경제구조(고기술 산업의 증가와 저기술 산업의 감소)를 초래해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이 부족한 고급기술 노동자 임금을 증가시키고, 노동공급이 풍부한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감소시켜 전문직·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인구학적 변화, 특히 이혼·가족해체 증가 등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가구주의 증가는 소득불평등도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선진국의 소득불평등 요인 분석 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경우 소득불평등에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고소득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보다 높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전강수, 2005).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원인을 두 개의 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의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소득불평등 원인에 대한 장기분석을 위해 1985-2004년간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해 보고자하며, 둘째는 IMF 관리체제 전후의 소득불평등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1995-2004년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1995-2004년(10년)간의 자료는 시계열분석을 위해서는 기간이 짧아 반기, 즉 20반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⁶⁾ 분석을 위한 변수정의 및 자료수집, 분석모델은 다음과 같다.

(1) 변수 정의 및 자료 수집

①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㉞ 지니계수와 ㉞ 소득5분위 배율이 사용되었다.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 통계원시자료제공시스템(Micro Data Service System)(통계청, 2006b)을 통해 수집했다. 연 및 반기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은 SAS 프로그램(조인호, 2005; 성내경, 2004)을 이용하여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구하였다.

② 독립변수

㉞ 경기변동: 실업률

경기변동, 특히 불경기과 관련된 변수로 실업률을 사용했다. 본 연구는 도시근로자 가구 위주의 분석이기 때문에 실업률의 경우 농가를 제외한 실업률을 사용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를 통해 수집했다. 반분기 자료는 분기별 자료를 평균하여 구했다.

6) 1995-2004년간 분석의 경우 사례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분기별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분기별 자료의 경우 사업장마다 상여금 지급 월이 달라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이 불안정해(변동이 심해) 반기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㉔ 고용불안정 및 고용구조 변화: 비정규직 비율, 대기업·소기업 임금비율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에 의해 야기된 고용불안정 및 고용구조 변화를 대변하는 변수로 ㉔ 비정규직 비율 ㉕ 대기업과 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비율을 사용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농가를 제외한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율을 사용했으며, 대기업·소기업 임금비율은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10-29인 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으로 나누어 계산했다.⁷⁾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를 통해 수집했으며, 대기업·소기업 평균임금에 대한 자료는 노동부의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통해 수집했다. 비정규직 반기별 자료는 분기별 자료를 평균하여 구했으며, 대기업·소기업 반기별 자료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매 6월과 12월에 발표하는 반기별 자료를 이용했다.

㉕ 인구학적 변화: 여성 가구주 비율

인구학적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로 여성가구주 비율을 사용했다.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인구학적 변수로 여성가구주 비율과 노인가구주 비율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불평등도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에 노동활동에 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성가구주만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노인가구주는 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여성가구주 비율은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여 가구주 중 여성가구주 비율(여성가구주 수÷전체가구주 수)을 사용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연보"를 통해 수집했다.⁸⁾

㉖ 재산불평등: 지가변동률

재산불평등을 나타내는 변수로 지가변동률을 사용했다. 서구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재산,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지가변동률을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반기별 자료는 분기별 자료를 평균해서 구했다. 지가변동률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했다.⁹⁾

(2) 분석모델

① 지니계수 원인분석

$$Y = a + b_1UE + b_2NE + b_3WA + b_4WH + b_5EC$$

여기서 Y=지니계수, UE=실업률, NE=비정규직비율, WA=대기업·소기업 임금비율, WH=여성

7) 소기업 노동자에 10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자도 포함해야 옳으나 이에 대한 장기간의 자료가 없어 부득이 10-29인 사업체의 노동자만을 포함시켰다.

8) 반기별 여성가구주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해당 연도 상반기 여성가구주 비율=해당 연도 여성가구주 비율-(해당 연도 여성가구주 비율-전 연도 여성가구주 비율)×1/4. 해당 연도 하반기 여성가구주 비율=해당 연도 여성가구주 비율+(다음 연도 여성가구주 비율-해당 연도 여성가구주 비율)×1/4. 해당 연도 여성가구주 비율은 해당 연도(1-12월, 중간월 6월) 평균 여성가구주 비율이고, 상반기, 하반기 여성가구주 비율은 각각 상반기(1-6월, 중간월 3월), 하반기(7-12월, 중간월 9월) 평균 여성가구주 비율이라는 가정 하에서 이 공식을 이용하였다.

9) 통계청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nos.go.kr>임.

가구주비율, EC=지가변동률

② 소득5분위 배율 원인분석

$$Y = a + b_1UE + b_2NE + b_3WA + b_4WH + b_5EC$$

여기서 Y=소득5분위 배율, 독립변수는 지니계수 원인분석의 경우와 같다.

3) 분석결과

(1) 장기(1985-2004년)시계열 분석결과

소득불평등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먼저 각 독립변수와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 배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후,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2>는 각 독립변수와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 배율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종속변수가 지니계수인 경우(<표 2>의 좌측)를 살펴보면, 실업률과 비정규직비율 2개 변수가 지니계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비정규직비율 모두 지니계수와 정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률이 높거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지니계수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의 상관관계는 비정규직 비율($\gamma=.872$), 실업률($\gamma=.7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소득5분위 배율인 경우(<표 2>의 우측)를 살펴보면, 종속변수가 지니계수인 경우와 거의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즉 실업률과 비정규직비율만 소득5분위 배율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각 변수의 상관관계는 비정규직 비율($\gamma=.884$), 실업률($\gamma=.7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각 독립변수와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 배율과의 상관관계 (1985-2004)

독립변수	종속변수: 지니계수		종속변수: 소득5분위 배율	
	r(상관계수)	p(유의도)	r(상관계수)	p(유의도)
실업률	.723	.000***	.750	.000***
비정규직비율	.872	.000***	.884	.000***
대·소기업임금비율	.152	.522	.278	.235
여성가구주비율	.209	.377	.290	.215
지가변동률	.071	.765	-.064	.788

주: *, p<0.05, **, p<0.01, ***, p<0.001

분석모형에 의해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 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토해 본 결과 여성가구주비율이 다른 독립변수들, 특히 대·소기업임금비율과 높은 상관관계($\gamma=.829$)를 갖고(<표 3>), 다중회귀분석 결과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가 8.145로 높게 나와서 여성가구주 비율을 빼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¹⁰⁾ 한편, 구성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기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종속변수가 지니계수인 경우는 Durbin-Watson D가 2.342, 소득5분위 배율인 경우는 1.793으로 두 경우 모두 자기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각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 (1985-2004)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대·소기업 임금비율	여성가구주 비율	지가변동률
실업률	1.000	.562	-.044	-.164	-.342
비정규직비율		1.000	.324	.482	-.010
대·소기업임금비율			1.000	.829	-.266
여성가구주비율				1.000	-.165
지가변동률					1.000

분석모델에 의해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 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가 지니계수인 경우를 살펴보면, 4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은 지니계수를 분석하는데 유의미하며($p < 0.001$), 지니계수를 예측하는데 85.7%($R^2 = .85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지가변동률 3개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던 지가변동률이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지가변동률이 지니계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지가변동률 모두 지니계수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지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지니계수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비정규직비율($\beta = .587$), 실업률($\beta = .483$), 지가변동률($\beta = .256$)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소득5분위 배율인 경우를 살펴보면, 4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은 소득5분위 배율을 분석하는데 유의미하며($p < 0.001$), 소득5분위 배율을 예측하는데 87.2%($R^2 = .87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 독립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이 지니계수($R^2 = .857$)보다 소득5분위 배율($R^2 = .872$)을 약간 더 높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실업률과 비정규직비율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비정규직비율 모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률이 높을수록, 비정규직비율이 높을수록 소득5분위 배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비정규직비율($\beta = .552$), 실업률

10) 다중공선성 검증은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높아 개별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t 값이 작으는데), 회귀모델 전체의 R^2 값이 커지는(F 값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변수를 찾아내려고 실시하는 검증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0.7 이상이거나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 이상인 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독립변수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정충영·최이규, 2003: 193-194, 203; 김계수, 2004: 252-253).

($\beta=.500$)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소득불평등 원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985-2004)

독립변수	종속변수: 지니계수				종속변수: 소득5분위 배율			
	β (베타)	t	t유의도	VIF	β (베타)	t	t유의도	VIF
상수		9.893	.000			1.825	.088	
실업률	.483	3.740	.002**	2.215	.500	4.089	.001**	2.215
비정규직비율	.587	4.609	.000***	2.151	.552	4.576	.000***	2.151
대·소기업임금비율	.052	.480	.638	1.531	.163	1.601	.130	1.531
지가변동률	.256	2.406	.029*	1.506	.156	1.544	.143	1.506
Adj R ² =.857, F=29.437, F유의도=.000					Adj R ² =.872, F=33.222, F유의도=.000			

주: * ; p<0.05, ** ; p<0.01, *** ; p<0.001

(2) IMF 전후(1995-2004년) 시계열 분석결과

<표 5>는 각 독립변수와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 배율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종속변수가 지니계수인 경우를 살펴보면, 실업률과 비정규직비율 2개 변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대·소기업임금비율과 여성가구주비율은 낮은 유의수준(p<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변수 모두 지니계수와 정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대·소기업임금비율(대기업 근로자 월평균임금÷소기업근로자 월평균임금), 여성가구주비율이 높을수록 지니계수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비정규직비율($\gamma=.783$), 실업률($\gamma=.699$), 대·소기업임금비율($\gamma=.404$), 여성가구주비율($\gamma=.384$) 순으로 높게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소득5분위 배율인 경우를 살펴보면, 실업률과 비정규직비율 2개 변수가 소득5분위 배율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대·소기업임금비율은 낮은 유의수준(p<0.1)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실업률($\gamma=.753$), 비정규직비율($\gamma=.711$), 대·소기업임금비율($\gamma=.431$) 순으로 높게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85-2004년의 자료 분석결과(<표 2>)와 비교해 보면 1985-2004년 자료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대·소기업임금비율이 1995-2004년 자료 분석결과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 관리체제 이후 대기업과 소기업의 임금격차 심화가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표 5> 각 독립변수와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 배율과의 상관관계 (1995-2004)

독립변수	종속변수: 지니계수		종속변수: 소득5분위 배율	
	r(상관계수)	p(유의도)	r(상관계수)	p(유의도)
실업률	.699	.001**	.753	.000***
비정규직비율	.783	.000***	.711	.000***
대·소기업임금비율	.404	.078 [#]	.431	.058 [#]
여성가구주비율	.384	.095 [#]	.214	.366
지가변동률	-.035	.882	-.080	.738

주: [#]; p<0.1, *; p<0.05, **; p<0.01, ***; p<0.001

분석모델에 의해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 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토한 결과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7이하이고(<표 6>),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도 10 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종속변수가 지니계수인 경우는 Durbin-Watson D가 1.850, 소득5분위 배율인 경우는 1.713으로 두 경우 모두 자기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각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 (1995-2004)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대·소기업 임금비율	여성가구주 비율	지가변동률
실업률	1.000	.414	-.101	-.115	-.445
비정규직비율		1.000	.412	.513	.330
대·소기업임금비율			1.000	.521	.472
여성가구주비율				1.000	.304
지가변동률					1.000

분석모델에 의해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가 지니계수인 경우를 살펴보면, 5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은 지니계수를 분석하는데 유의미하며(p<0.001), 지니계수를 예측하는데 80.4%($R^2=.80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대·소기업임금비율은 낮은 유의수준(p<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대·소기업임금비율은 정적으로 지니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대·소기업임금비율이 높을수록 지니계수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실업률($\beta=.496$), 비정규직비율($\beta=.453$), 대·소기업임금비율($\beta=.271$)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2000년의 자료 분석결과(<표 4>)와 비교해 보면 1985-2004년 자료 분석결과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지가변동률이 1995-2004년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외환위기 다음 해인 1998년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심화되었는데, 지가상승률은 13.6%나 낮아져 이것이 단기자료(1995-2004년) 분석에서 역으로(부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소득5분위 배율인 경우를 살펴보면, 5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은 소득5분위 배율을 분석하는데 유의미하며($p < 0.001$), 소득5분위 배율을 예측하는데 84.5% ($R^2 = .84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개 독립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이 지니계수 ($R^2 = .804$)보다 소득5분위 배율 ($R^2 = .845$)을 좀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대·소기업임금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변수 모두 소득5분위 배율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대·소기업임금비율이 높을수록 소득5분위 배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실업률 ($\beta = .552$), 대·소기업임금비율 ($\beta = .452$), 비정규직비율 ($\beta = .407$)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2004년의 자료 분석결과(<표 4>)와 비교해보면 1985-2004년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대·소기업임금비율이 1990-2004년 자료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IMF관리체제 이후 대기업과 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 심화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표 7> 소득불평등 원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1995-2004)

독립변수	종속변수: 지니계수				종속변수: 소득5분위 배율			
	β (베타)	t	t유의도	VIF	β (베타)	t	t유의도	VIF
상수		2.763	.015			2.556	.023	
실업률	.496	2.964	.010*	2.722	.552	3.708	.002**	2.722
비정규직비율	.453	2.540	.024*	3.087	.407	2.568	.022*	3.087
대·소기업임금비율	.271	2.076	.057#	1.650	.452	3.897	.002**	1.650
여성가구주비율	.105	.740	.471	1.952	-.123	-.978	.345	1.952
지가변동률	-.124	-.791	.442	2.372	-.144	-1.038	.317	2.372
	Adj $R^2 = .804$, F=16.613, F유의도=.000				Adj $R^2 = .845$, F=21.742, F유의도=.000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4. 요약 및 정책과제

1) 요약

소득불평등 실태 및 원인분석을 통해 파악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불평등도 실태를 지니계수로 분석한 결과 1985년 높았던 지니계수(0.2877)는 1991년까지 계속해서 감소해 최저점을 이룬 후(0.2445), 1992-1996년 동안 약간씩 높아지다가 IMF 관리체제 다음 해인 1998년 급상승 했으며(0.2903), 1999-2003년 동안 증감을 반복했으나 2004년 0.288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불평등도 실태를 소득5분위 배율로 분석한 결과도 거의 같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IMF 관리체제에 의해 높아진 소득불평등도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수준도 외환위기 이전보다 더 높아졌는데 소득불평등도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소득불평등 원인에 대한 장기분석을 위해 1985-2004년간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에는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자가변동률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자가변동률이 높을수록 지니계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비정규직비율, 실업률, 자가변동률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5분위 배율에는 실업률과 비정규직비율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률, 비정규직비율이 높아질수록 소득5분위 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비정규직비율, 실업률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IMF 관리체제 전후의 소득불평등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1995-2004년간의 반기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에는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대·소기업임금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대·소기업임금비율이 높을수록 지니계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대·소기업임금비율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5분위 배율에는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대·소기업임금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실업률, 대·소기업임금비율, 비정규직비율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1985-2004년 자료의 분석결과와 1995-2004년 자료의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1985-2004년 자료 분석결과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자가변동률이 1995-2004년 자료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5-2004년 자료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대·소기업임금비율이 1995-2004년 자료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2004년 자료 분석결과 자가변동률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IMF 관리체제 다음 해인 1998년 소득불평등도는 매우 심화되었는데 자가변동률은 크게 떨어져 단기 자료(1995-2004년) 분석시 역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1995-2004년 자료 분석결과에서

대·소기업임금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대기업과 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 심화가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지가변동률, 대·소기업임금비율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도 이와 관련해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업률 완화를 위한 정책은 노동수요적 측면과 노동공급적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될 수 있다. 노동수요적 측면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¹¹⁾ 높은 산업·직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으로 노사화합, 각종 규제의 해소, 이공계 활성화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들 수 있다(채구묵, 2004: 174-176). 노동공급적 측면은 노동자들, 특히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들이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를 위한 정책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제도 개선, 청년실업문제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비자발적 비정규직비율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정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희노동력이 존재하는 한 사용자들은 비용절감과 인력조절의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비정규고용을 확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노동경쟁력이 약한 근로자나 노동시장의 주변계층에 속한 근로자들은 비정규근로자로 취업하기 쉬우며, 한 번 비정규직에 취업되면 노동시장 분절에 의해 쉽게 그 지위를 벗어나기 어려워 빈곤의 늪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고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비정규고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건전한 노동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정규고용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고용보장적인 면과 노동복지적인 면으로 나누어 검토될 수 있다(채구묵, 2003: 303-305).

셋째, 토지가격을 안정화 또는 인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저소득층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계층간 위화감과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소득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근로의욕 고취,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억제되어야 한다. 토지가격 인하는 고지가·고비용의 한국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토지가격 인하는 기업의 시설투자 비용과 물류 및 보관비용을 인하시켜 생산비를 저하시킬 것이다. 또한 토지가격 인하는 주택비용, 농·공산물 가격 등의 인하를 유발해 근로자들의 생계비 저하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2005년 8월 31일 및 2006년 3월 30일의 부동산정책은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

11)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란 고용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것으로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을 가져왔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최근 급격한 기술발달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토지에 대한 공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동산 후속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대기업·중소기업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나누어 검토될 수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생산성 향상, 연구개발 활성화, 시장개척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지원자금 확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관계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부당하도급 근절,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해 이룩한 생산비 절감을 대기업이 부품구입 시 단가를 낮추어 구매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관행의 근절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곽상경. 2003. 『계량경제학』. 다산출판사.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_____. 2004. “한국의 빈곤, 왜 감소하지 않는가?: 1990년대 이후 빈곤 추이의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4): 57-78.
- 김계수. 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데이터솔루션.
-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113-149.
- 김기덕·손병돈. 1995. “1982-92년간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변화추세: 소득원천별, 사회보장수혜, 사적이전, 조세부담”. 『사회복지연구』 6: 91-115.
- 김미곤·여아진·양시현·강성호·김태완·이강민. 1999. “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란. 2004. “신빈곤(new poverty)의 발생구조와 빈곤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근로빈곤(working poor)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245-273.
- 김진욱. 2002.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가구주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19: 267-293.
- 김태성. 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_____. 2005. “양극화시대에서의 사회보장”. 참여정부 사회양극화의 대응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서울시립대, 2005. 6. 11).
- 김환준. 2005. “복지국가의 빈곤 추세와 변화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1): 271-297.
- 노동부. 1985-2005.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 박순일·김미곤·이수아·정희태·이경신·하길웅. 1994. “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찬용·김진욱·김태완. 1999.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경제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찬용·강석훈·김태완. 2002. “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내경. 2004. “SAS System과 SAS 언어”. 자유아카데미.
- 성명재. 2001.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_____. 2002. “인구학적 특성 변화가 도시가구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혼과 노령화 문제를

- 중심으로”. 『재정포럼』 3월호: 36-53.
- 손병돈. 1999.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39: 157-179.
- 신동균. 2006. “소득분포의 양극화: 개념과 실태”. 『월간 노동리뷰』 13: 63-80.
- 안국신·박원규·유항근. 1995. “우리나라 계층별 소득분배의 결정요인 분석”. 『계량경제학보』 6: 57-86.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경준. 2003.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KDI정책포럼』 167: 1-22. 1
- 유경준·김대일. 2002.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 변화와 재분배정책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_____. 2003.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이정우·이성림. 2001. “경제위기와 빈곤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7(2): 79-109.
- 장현준. 1986. “한국도시부문의 표준생계비”. 한국개발연구원.
- 전강수. 2005. “부동산 양극화의 실태와 해소 방안”. 『역사비평』 71(여름): 171-203.
- 전병유·김혜원·신동균. 2006.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진호·황덕순·금재호·이병희·박찬임. 2005.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정충영·최이규. 2003.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 조인호. 2005. “SAS 강좌와 통계컨설팅”. 영진닷컴.
- 채구묵. 2003. “비정규근로자의 인구학적 및 직업·산업별 특성에 관한 연구: 단시간 및 일용직·임시직 고용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8: 276-310.
- _____. 2004.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56(3): 159-181.
- 최강식·정진호. 2003. “한국의 학력간 임금격차 추세 및 요인분해”. 『국제경제연구』 9(3): 183-208.
- 최정균·최재성. 2002. “사회복지이전의 빈곤감소 효과성과 표적효율성 분석: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2(1): 25-46.
- 통계청. 1985-2005. “경제활동인구연보”.
- _____. 2006a.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 _____. 2006b. 통계원시자료제공시스템(http://mdss.nso.go.kr/old_mdss/).
- 홍경준. 2002.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 분석: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0: 61-85.
- Blinder, A. S. and H. Y. Esaki. 1978. "Macroeconomic Activity and Income Distribution in the Postwar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0(4): 604-609.
- Budd, E. C. and T. C. Whiteman. 1978. Macroeconomic Fluctuation and the Size Distribution of Income and Earnings in the United States". pp. 11-27 in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 Inequality*, edited by Zvi Griliches et al. Halsted Press.
- Danziger, S. and P. Gottschalk. 1995. *America Unequal*. Harvard University Press.
- Duclos, J. Y., J. Esteban, and D. Ray. 2004.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and Estimation". *Econometrics* 72(6): 1737-1772.
- Esping-Anderson, Gosta.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eeman, Richard B. 1999. *The New Inequality: Creating Solutions for Poor America*. Beacon

- Press.
- Iceland, J. 2003. "Why Poverty Remains High: The Role of Income Growth, Economic Inequality, and Changes in Family Structure, 1949-1999". *Demography* 40(3): 499-519.
- Karoly, L. A. 1993. "The Trend in Inequality among Families, Individuals, and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A Twenty-Five Year Perspective". pp. 19-97 in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edited by S. Danziger and P. Gottschalk. Russell Sage Foundation.
- Kuznets, Simon. 1974. "Demographic Aspects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ong Families: Recent Trends in the United States". pp. 223-245 in *Econometrics and Economic Theory: Essays in Honor of Jan Tinbergen*, edited by W. Sellekaerts. Macmillan: London.
- Mendershausen, H. 1946. *Changes in Income Distribution during the Great Depression*.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Paglin, Morton. 1975. "The Measurement and Trend of Inequality: A Basic Revi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5(Sept.): 598-609.
- Pieper, Ute and Lance Taylor. 1998. "The Revival of the Liberal Creed: The IMF, the World Bank, and Inequality in a Globalized Economy". pp. 37-63 in *Globalization and Progressive Policy*, edited by Dean Baker et 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om, Graham (ed.). 1990. *New Poverty in the European Community*. Macmillan Press Ltd.
- Skocpol, Theda. 2000. *The Missing Middle: Working Families and the Future of American Social Policy*. Norton.
- Smeeding, Timothy M., Lee Rainwater, and Gray Burtless. 2001. "U. S. Poverty in a Cross-national Context". pp. 162-189 in *Understanding Poverty*, edited by S. Danziger and R. H. Havema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Wolfson, Michael C. 1997. "Divergent Inequalities: Theory and Empirical Result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3(4): 401-422.

An Analysis of the Conditions and Causes of Income Inequality : Focusing on the Urban Worker Households

Chai, Goo-Mook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onditions and causes of income inequality and seeks assignments for mitigating income inequality.

An analysis of the conditions and causes of income inequalit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come inequality, which rapidly increased after the economic crisis, increased and reduced repeatedly during 1999-2004, and remained a level in 2005 as high as that of the year directly after the economic crisis. Second,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income inequality by utilizing the long-term data(1985-2004) shows that unemployment rate, nonstandard employment rate, and the rising rate of land prices positively affect income inequality. Third,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income inequality by utilizing the data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crisis(1995-2004) demonstrates that unemployment rate, nonstandard employment rate, and the workers' income ratio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enterprises positively affect income inequality. Fourth, the rising rate of land prices which significantly affects income inequality in the data of 1985-2004 does not affect income equality in the data of 1995-2004, and the workers' income ratio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enterprises which does not affect income inequality in the data of 1985-2004 significantly affect income equality in the data of 1995-2004.

These results suggest several implications for mitigating income inequality. First, alternative plans to reduce unemployment rate must be prepared. Second, policies to reduce nonstandard employment rate should be established. Third, programs to stabilize or lower the land prices must be deliberated. Fourth, a master-plan to support small to medium enterprises must be carried out in order to reduce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to medium enterprises.

Key words: income inequality, income bipolarization, income disparity, poverty